“강제 퇴진 외 방법 없어…새누리 비박계와 연대할 것”

3野 박대통령 탄핵 당론 채택

민주당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

국민의당 검찰 강제수사 등 촉구

속전속결案 등 대안도 봇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탄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 등 하야 불가를 고수하며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고 말 바꾸기에 나선 상황에서 ‘강제적인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야권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쉽지 않은 관문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민심과 함께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서 탄핵 발의 시기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탄핵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이 최고조에 달하고, 국회 의석수 3분의2 이상 찬성을 확인하면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 대체로 26일 이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 출국금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검찰에 촉구 ▲거국중립내각 총리 임명을 위한 야3당 공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기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 정상화 운동본부’로 격상, 전환했으며 산하에는 ‘국정 정상화 추진단’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운동 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졌다”며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탄핵 돌입을 일제히 선언했지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협조 ▲헌법재판소의 판단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시간 등 넘어야할 산이 만만치 않다.

이런 우려 속에 탄핵 로드맵을 짤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과 조속한 헌재 결정 등 다양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의 속전속결론’을 제시했다. 헌법재판관 2명이 내년 1,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박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불리함이 있다는 점에서 “내년 1월 31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원회 소집을 이번 주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총리와 탄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버티기 언제까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경찰이 경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박대통령 대면조사 계속 추진…조만간 요청”

“제3자 뇌물죄 수사 계속할 것”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검찰로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또는 개인회사를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중립적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밝히자 행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노림수가 포함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을 추천하는) 야당이 언제부터 중립적이라고 믿었는지, 혹시 이 말이 특검 중립성을 문제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피의자 대통령 ‘국정 버티기’ 막을 방법 없다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논란 확산

헌정 사상 초유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법적인 부분만 보자면 박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죄가 없다고 간주된다. 게다가 헌법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방법도 없다. 더욱이 박 대통령 측이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 박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자릿수의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흐름 속에서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애초 참석을 검토하던 22일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내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용·정몽구 등 8대그룹 총수 내달 5일 국정조사 증언대 선다

김기춘·우병우 등 21명 증인 채택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8대 그룹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이와 함께 국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차은택·고영태·이성한 씨도 국회 증언대에 선다. 여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모두 2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1차 청문회는 다음 달 5일, 2차 청문회는 다음 달 6일, 3차 청문회는 다음달 13일, 4차 청문회는 다음달 14일 열기로 했다.

1차 청문회에는 기업 증인들이 출석하고,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씨 등 사건의 핵심 인물과 전직 공직자들이 출석한다. 2차 기관보고는 12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된다.

여야 3당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국조 일정은 추후 다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장소는 박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에 연루된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 등 세 곳으로 결정됐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국가정보원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한 끝에 기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과 국정원 관계자·정윤회 씨, 최 씨 일가 등을 포함한 200명의 증인 요구 명단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